

주제회의
사회적경제

기후위기와 기후정의

한재각
[기후정의동맹 집행위원]

기후위기가 점차 현실화, 가시화되고 있다.

유럽의 폭염과 산불, 아프리카의 가뭄과 기아, 파키스탄의 홍수 등 세계 곳곳에서 기후재난이 벌어지고 있다. 한국도 마찬가지다. 지난 매년 사이에 폭염과 가뭄, 산불, 홍수와 태풍 등의 피해가 반복되고 있다. 그러나 기후위기를 막을 수 있으리라는 믿음은 점점 낮아지고 있다. 파리협정에서 결의한 1.5도 온도 상승 제한 목표가 지켜지기 어려울 것이라는 과학자들이 분석이 잇따르고 있다. 과감한 온실가스 감축 약속은 코로나 재난에 이은 '회색' 경제 회복 정책으로, 그리고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등의 이유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한국만 해도 여전히 석탄발전소를 짓고 있으며, 새로운 공항 건설도 추진중이다.

기후위기는 본질적으로 부정의와 불평등의 문제다.

기후위기를 야기하는 직접적인 원인인 온실가스 배출을 가장 많이 배출한 국가와 계층은 경제적 부를 독점하고 있으며, 기후재난으로 피해를 경험하는 국가와 계층은 경제적 불평등의 극단에 처해 있다. 지구적으로 상위 10%의 소득 계층이 연간 배출하는 온실가스량의 거의 50%를 차지하는 반면, 하위 50%의 소득 계층은 겨우 10%를 넘을 뿐이다. 지금 오랜 가뭄으로 기아에 내몰린 아프리카의 뿔 지역, 소말리아, 에티오피아, 케냐의 2,200만명의 사람들은 온실가스를 거의 배출하지 않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 큰 홍수로 인해서 전 국토의 1/3이 물에 잠기고, 인구의 1/7인 3,300만명의 수재민이 발생한 파키스탄 역시도 온실가스 배출이 대단히 적은 나라이다.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다. 지난 8월 중부지역 폭우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지만, 반지하 주택 거주민의 죽음은 '재난의 불평등'을 극적으로 보여주었다.

기후위기 해결책은 '평등'이다.

기후위기를 해결하려는 노력은 그러한 불평등을 해결하는 노력과 연계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 기후정책과 기후행동은 불평등을 재생산하고 악화시키는 것으로 귀결될 수 있다. 기후정의 운동의 지향점은 협소하게 온실가스 감축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기후위기와 사회적 불평등을 구조적으로 재생산해내는 '자본주의 성장체제'를 넘어서려는데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기후위기 최일선 당사자들이 단결하고 사회적 권력을 획득하는 사회운동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서 '가난한 자들의 환경주의'를 형성하고 민주주의를 혁신해야 한다.